

학교시설 정책의 변화와 발전 방향

Changes and Challenges towards Improvement of Polities for School Facilities



조 일 환 / 부회장,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Cho, Il-Hwan / Planning & Cordination Dept. Education Facilities Support, Ministry of Education
ihcho@mest.go.kr

1. 개요

우리나라 학교의 학습방법은 과거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최근에는 창의·인성교육, 교과교실제 수업, 특기·적성교육, 스마트교육,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매우 다양하게 교육프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강화, 석면함유 물질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학생 건강 위험 해소 등 친환경 요소의 반영, 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에너지절감형 학교시설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 안전, 건강과 교육환경 및 에너지절감 등은 단순히 시설적인 측면을 벗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정책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학교시설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그동안의 학교시설 정책

우리나라 학교시설은 해방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하여 왔으며, 그 동안의 변화는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진행해 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학생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로서 지방교육재정 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서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일반교실 위주의 학교시설 또는 교실중축 정책을 교육행정관료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로

서 당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었다. 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표준설계도”는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하고, 교당 학급수는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는 각각 30학급으로서 특별교실형 학교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구의 지속적으로 증가에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여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과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이 발생하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2부제 수업을 시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시설에 단열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자연형 태양열 교실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설계도의 개발·보급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수준이 종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내 화장실의 경우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서 당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위생적으로 불결한 화장실 이용을 기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부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설계도”를 개발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이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으로 인해 대부분 별동으로 지어진 화장실이 건물 내부에 수세식으로 설치되고 학교환경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표준설계도에 의한 학교건축은 지역적 여건 및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시설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부는 “서울 불암초등학교 현대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 때 학교시설의 질적 수준을 주도해왔던 각종 표준설계도는 결국 폐지되고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지역적 여건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시설을 건축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전체 학생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신도시조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신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일시 호전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정책은 제한된 학교부지 내에 무리한 교실증축을 함으로써 운동장 축소 등 교육환경을 오히려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 이후 다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신설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시행하면서 학교시설이 성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현재의 학교시설 정책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교과교실제, 특기적성교육,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은 이러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에너지·재난 및 안전 등 각종 정책이 학교시설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 요구된다.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배치계획, 공간·환경구성 및 정부의 각종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공영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학교는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시설 건축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기존학교의 경우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학교시설 정책 반영에 대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도 문제이지만 우리부 차원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정책마다 시범사업 수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녹색·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 사업으로 에너지진단사업을 일부 학교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쿨사업은 현재까지도 교육청마다 1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 또한 매년 1% 수준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향후 발전 방향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 특기적성교육,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구축과 함께 에너지절약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 등 각종 정부 정책이 학교시설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적정한 공사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신설학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동안 교육청 주도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교육전문가, 사용자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통해 한 단계 더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공영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학교에 대하여도 기획단계부터 교육전문가, 사용자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의 증액 확보를 통해 각종 정부 정책이 학교시설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학교의 노후시설 개축, 그린스쿨(대수선), 내진보강, 화장실 개선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육환경개선비의 점진적 증액을 통해 각종 정부 정책이 학교시설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학교시설 정책이 교육청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부 차원의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시설환경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적 여건 및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획,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시설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